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박경준)

담 당 : 경실련 정치입법팀 T. 02-3673-2141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총 9매)

보도일자 : 2024.02.21.

배포일자 : 2024.02.21.(오전 10시 30분 이후)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1.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식순 :

* 사회 : 서회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위성정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군소정당 독자적으로 가야한다(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10:55~11:00 : 선언문낭독(김상연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 11:00 : 폐회

<경과보고>

- 거대 두 정당이 다시금 위성정당의 창당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 작업에 착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21대 총선 이후로는 두 번째로 발생한 위성정당 사태로 기록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는 의석 수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보다 근접하게 조정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연계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정당에게는 더 많은 연동 배분 의석을 제공하고, 반대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에게는 해당 의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군소 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양당은 이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고, 결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연동 배분 의석의 절반만을 실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가 고정되어 있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한 반발을 넘어,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데 앞장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를 핑계로 비례연합정당의 창당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례연합정당의 소속 의원들의 탈당과 입당이 이어지면서, 이 정당 또한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이 명백해졌습니다.
- 위성정당의 창당은 비례성을 증대시키려는 선거제도 개혁의 노력을 되돌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 등록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2020.3.26.),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처리하였습니다(2020.4.7.).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꺾주기' 사태와 투표용지의 길이가 48cm에 달하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러한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 21대 총선이 마무리된 후, 21대 국회는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의 문제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후퇴시키려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위성정당 방지법의 통과를 미루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하였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마치고,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5,000명 이상을 모집하여 시도당을 만들 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명명하여 창당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겪었던 '의원 꺾주기', 당 지도부 간의 갈등, 비례연합정당 내에서의 의석 배분 문제 등과 같은 구태의연한 문제들이 다시금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회견문>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종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이 다시 한번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하는 위성정당 문제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킨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에 반한다.

둘째,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위성정당은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 이전 선거에서

보듯, 위성정당은 선거 후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위성정당의 운영은 거대양당의 권력 남용이며, 정당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는 선거제도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거대양당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
-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

군소정당들에게는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 경실련은 다시 한번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와 군소정당들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한다.

2024.2.21.

전국 경실련 일동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류중석
경실련 공동대표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 김형태
경실련 중앙위 의장 김철환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 채원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 김연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경준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김숙희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조직위원장 김송원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안병주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염해숙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조형수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임종연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지홍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박준상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지우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서운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영태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영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응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한명진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안병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최병학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윤재철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전영진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구교형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하숙례
광명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효숙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박충수
김포경실련 공동대표 김형창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최인수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김상연
수원경실련 집행위원장 박제현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현호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정정순
안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조안호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정주영
이천여주경실련 대표 신해진

이천여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권영배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심재상
강릉경실련 비상대책위원장 권상동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박경철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윤재선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신동현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강인영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효실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옥근호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상열
거제경실련 조직위원장 황정원
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현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옥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최낙렬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김준희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심영배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정동원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이훤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광배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이상권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박승옥
순천경실련 상임대표 신현일
순천경실련 집행위원장 장동식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심재수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최상덕
여수경실련 고문 이철
여수경실련 집행위원장 직무대리 장준배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오운석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김학윤
전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수진
정읍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정읍경실련 공동대표 최경열
정읍경실련 집행위원장 고세창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권영호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장성욱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양백윤

<설명자료>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체 득표율을 기반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체 득표율에 비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받고, 반대로 적은 정당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게 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이 제도는 253개 지역구 의석과 47개 비례대표 의석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최대 30개 의석을 연동 방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석 중 일부만 연동 방식으로 배분하는 절충안입니다.

□ 의석 배분 방법

- ① 조정 정당 득표율 계산: 전체 득표율에서 의석 할당을 받지 못한 정당의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② 총 배분 의석 결정: 조정된 득표율을 바탕으로 전체 의석 배분을 결정합니다.
- ③ 지역구 의석 우선 배분: 총 배분 의석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를 뺍니다.
- ④ 연동배분 의석과 조정배분 의석 계산: 남은 의석을 연동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한을 초과할 경우 조정합니다.

□ 위성정당 창당 문제

-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 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손실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며(위성정당 미창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 미래통합당은 99석 배분받았어야 했으나, 위성정당 창당으로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배분받음), 선거보조금 등의 이중지급(더불어시민당은 총선 당시 선거보조금 24.5억과 총선 이후 경상보조금 9.8억 지급,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전 경상보조금 5.7억, 선거보조금 61.2억, 총선 이후 경상보조금 19.3억)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경실련 주장

-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의 즉각적 철회와 장기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합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연동배분

의석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2:1 수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지역구 의석 50% 이상 공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50% 이상 공천)가 필요합니다.

※ 당시 실제 정당득표율

- 더불어민주당 33.35%, 미래통합당 33.84%,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민생당 2.71%, 기타 8.22%

[2019년 이전 선거제도] 병립형에 비례 47석				
	지역구	비례	총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	163	18	181	60.33
미래통합당	84	18	102	34.00
정의당	1	5	6	2.00
국민의당	0	4	4	1.33
열린민주당	0	3	3	1.00
민생당	0	0	0	0.00
기타	0	0	0	0.00
무소속	5	0	5	1.67
	253	47	300	100.00

[2019년 선거제도] 50% 연동형에 비례 47석(30석은 연동형, 17석은 병립형)								
위성정당 창당					위성정당 미창당시			
	지역구	비례	총 의석	비율	지역구	비례	총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	163	17	180	60.00	163	6	169	56.33
미래통합당	84	19	103	34.33	84	15	99	33.00
정의당	1	5	6	2.00	1	12	13	4.33
국민의당	0	3	3	1.00	0	8	8	2.67
열린민주당	0	3	3	1.00	0	6	6	2.00
민생당	0	0	0	0.00	0	0	0	0.00
기타	0	0	0	0.00	0	0	0	0.00
무소속	5	0	5	1.67	5	0	5	1.67
	253	47	300	100.00	253	47	300	100.00

[경실련 안] 100% 연동형에 비례 확대 (지역구:비례 2:1 비율)								
위성정당 창당					위성정당 미창당			
	지역구	비례	총 의석	비율	지역구	비례	총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	163	48	211	55.53	163	0	163	42.89
미래통합당	84	48	132	34.74	84	49	133	35.00
정의당	1	13	14	3.68	1	34	35	9.21
국민의당	0	10	10	2.63	0	25	25	6.58
열린민주당	0	8	8	2.11	0	19	19	5.00
민생당	0	0	0	0.00	0	0	0	0.00
기타	0	0	0	0.00	0	0	0	0.00
무소속	5	0	5	1.32	5	0	5	1.32
	253	127	380	100.00	253	127	380	100.00